

교육

개관

2015년 9월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이 바뀐 교과서로 수업을 받았다. 국어는 '연필 잡기'부터 시작해 한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수학·영어 등의 과목은 교과서 쪽수 기준으로 분량이 20%가량 줄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었다.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초등학교에 안전교육 시간이 생겼다. 중학교에는 학생들이 지필 평가 없이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가 확대됐다. 고등학교는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에 대해 2018년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애초 2021학년도 시험부터 통합과목이 생기고 절대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정시모집 축소와 수시모집 확대를 우려한 여론 때문에 개편이 미뤄졌다.

저출산 현상과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력에 따라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이 19.0명, 초등학교가 22.3명, 중학교가 26.4명, 고등학교가 28.2명을 기록했다. 10년 전에 비해 학급별로 약 5~10명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보다 많지만,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2020년이 넘어가면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

■ 국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폐기...검정 체제로 전환

박근혜 정부가 교육현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폐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2017년 5월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새 역사교과서를 기존의 검정 체제에서 국정 체제로 바꾼다고 발표하고 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2017학년도부터 중·고교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새 교과서를 개발해 왔다.

국정화 발표 이듬해인 2016년 12월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써 뉴라이트 계열 건국절 사관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서술 분량이 길어지고, 독재·친일을 미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리가 진행 중이던 때였다.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교육현장 등 각계에서 비판이 일자 2016년 12월 27일 교육부는 2017년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대신 국·검정 혼용 체제를 택해 2018학년도부터 각 학교가 원하는 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를